

일본의 '배상문제' 이렇게 본다

1991. 8. 16

113

외국사례와 일본의 '배상문제' 윤 해 동

최근 들어 일본의 불완전하고 무책임한 전후 배상에 대해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차츰 커지고 있다. 일제의 한국 지배가 일제 패전으로 막을 내린 지 45년이나 지난 뒤에야 전쟁 배상에 대한 요구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 때늦은 느낌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요구가 높아지고 경제침략이 가속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시의적절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나아가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의 전쟁 책임을 완전하게 규명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상'이란 전승국이 패전국에 부과하는 전시피해 배상에 대한 요구이고 '보상'이란 전쟁의 승패에 관계없이 행위의 잘못이나 범죄성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그 죄를 갚아 주는 것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2차대전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은 전승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 가혹한 전쟁 배상을 요구받았다. 또한 같은 논리로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은 전쟁 당시 점령지구의 민간인에게는 전시피해의 보상을 해주어야 할 의

한다.

그러나 유독 일본만은 전후 처리에 가장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에 배상과 보상을 모두 요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차대전 발발 이후에 일본의 침략을 받아 짧은 기간 점령당했던 나라들과는 달리 36년 동안의

독일 등 지금도 민간보상 계속 일 정부만 줄곧 전쟁책임 회피

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30여개 피해국에 정부 차원의 보상을 끝냈고 아직까지 민간부분의 보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역시 2차대전중 강제 수용했던 일본계 주민에게 사과와 보상을 끝냈다고

일제 지배를 겪었고 일제가 벌인 전쟁에 가장 가혹한 동원을 당했으며 또한 일제 지배에 맞서 끈질긴 투쟁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과 배상의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일제 지배가 끝난 뒤 바로 미국과 소련이 점령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국가를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배상에 대한 요구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해에 따라 억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46년 미국은 일본에 대한 배상 요구에 한국의 재산을 보태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

의 태도는 한국을 점령의 대상으로 여기고 한국을 일본의 일부로 여기는 데서 비롯됐다.

일단 반쪽의 정부이지만 정부가 수립되자 이승만 정권은 일본에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미군정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그에 대신하여 맥아더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동맹체제 수립의 하나로 한-일 사이에 반공동맹을 맺게 하기 위해 두 나라 회담을 강요하였다.

1952년부터 시작된 한일회담에서는 '대일배상'의 청구는 포기한

이러한 재산청구권 문제는 5.16 이후 군부정권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계획을 급속하게 추진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한일협정에서 구하게 되자 그 성격이 급속하게 변질하게 된다. 결국 무상자금 3억달러, 유상자금 2억달러로 청구권은 결말을 보게 된다. 이 단계에 오면 벌써 그 전에 청구권으로 변질되어 있던 대일 배상권이 이제는 경제협력이란 명목으로 한국의 권리는 후퇴해버린다. 따라서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며, 그 자금 사용에서 한국은 일본에 종속되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 뒤의 '청구권자금' 사용내역을 보면 민간청구권 보상에 86억 7천3백만원(원)을 사용하고, 독립유공자 사업기금 조성에 20억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도 희생자 2만여명의 보상금 신청자가운데 71년에 일본으로부터 교부받은 2만여명의 군인·군속 희생자 명부를 바탕으로 75년에 9천5백46명에게 30만원씩 지급되었을 뿐이다. 불충분하기 짝이 없는 데다 그나마 여기에는 징용·정신대로 끌려간 사람들과 수많은 부상자들은 빠져 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명부는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도의 보상으로 강제 연행자에 대한 처리를 끝내려고 하는 일본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에도 반성의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일본은 태평양전쟁으로 침략했던 나라들인 버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월남, 타이 등에는 54년에서 59년에 걸쳐 모두 배상

을 끝냈다.

종전 뒤 일본이 옛 식민지의 전쟁희생자에게 직접 보상을 한 경우는 유일하게 대만뿐이다. 그것도 희생자들의 소송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전몰·전상자 3만 4백여명에게 1인당 2백만엔씩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한국정부에서도 이제까지의 미지근한 자세에서 벗어나 전후 배상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민간차원의 움직임에 떠밀려 소극적 자세로 이 문제를 대할 것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총괄적 피해를 조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일본정부에 제기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과제는 한-일의 우호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